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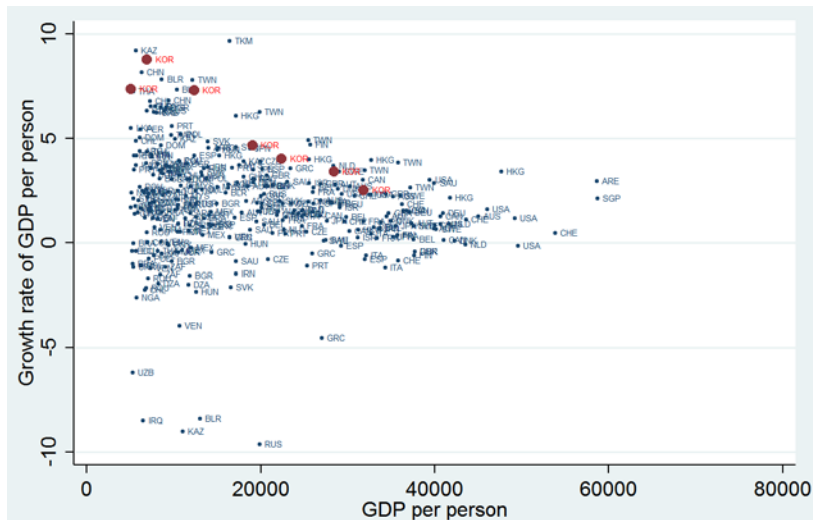
문재인 정부 출범 1년,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

토론: 서강대 송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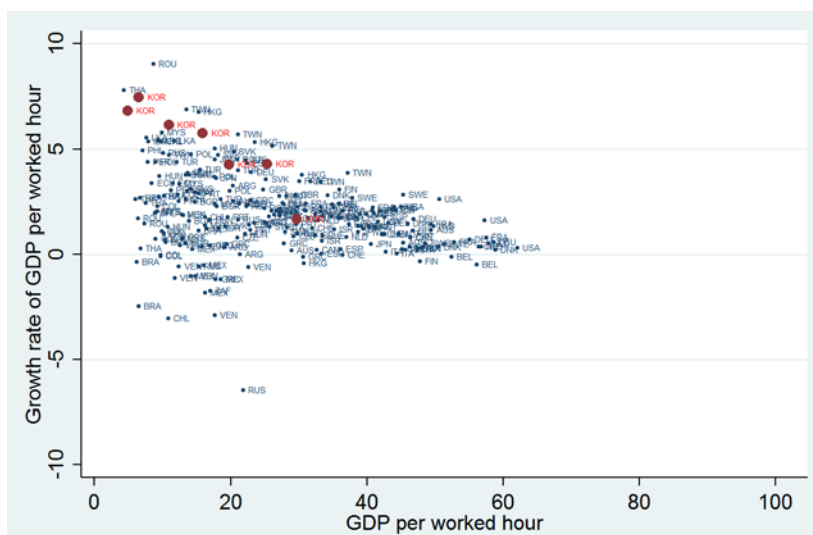
- 정부 첫 1년의 경제정책 성과 평가하기 이름
 - 한국경제 세계경제 영향 크게 받고, 경제정책의 효과 시차 깊.
 - GDP 작년 3.1%, 올해 1분기 연율 4.4% 성장했으나 현 정부의 공으로 돌리기 어려움.
 - 두 발제자 모두 구체적인 정책 평가 대신 우리 경제의 큰 흐름을 진단하고, 신 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
 - 이제민 교수 역사적, 제도적, 정책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 심층 분석하고, 문제 해결의 종합적 비전과 대책 제시
 - 김현욱 박사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의 거시정책 조화와 내수 중심 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, 반도체 중심의 수출과 혁신부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 강화할 것 주문
- 토론자도 이러한 평가에 대체로 동의
 - 부동산 중심의 성장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로의 선회는 세계 금리 상승 국면에서 한국경제의 시스템 위험 요인을 완화하려는 노력으로서 큰 의미
 - 방법에는 이견이 있지만 소득불평등 완화를 통하여 포용적 성장을 모색하고, 내수를 진작하여 수출 경기 침체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부족을 감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에 동의
- 이제민 교수 역사적 관점에서 1998년 외환위기를 한국경제 성장률 하락과 사회적 불평등 악화의 분기점으로 평가
 - 관치와 재벌 중심 체제가 상존하는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 각종 부작용 야기
 - 재벌과 외자 연합체가 이윤을 제고를 위해 노동과 하청업체를 압박하면서 각종 경제사회 문제 발생
- 외환위기 한국경제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지만 한 실로 구슬을 펴 때 중요한 구슬 놓칠 수도
 - 노동소득 분배율의 악화 2000년 이후 다른 선진국에서도 진행(기술적 요인?)

- 일인당GDP로 보았을 때 한국경제 2010년대 중반까지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(그림 1)
-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-2014 기간(마지막 붉은 점) 중 위 이하로 급락(그림 2)

<그림 1> 일인당 GDP(PPP)의 수준과 5년 평균 증가율 (1980-2014, PWT 9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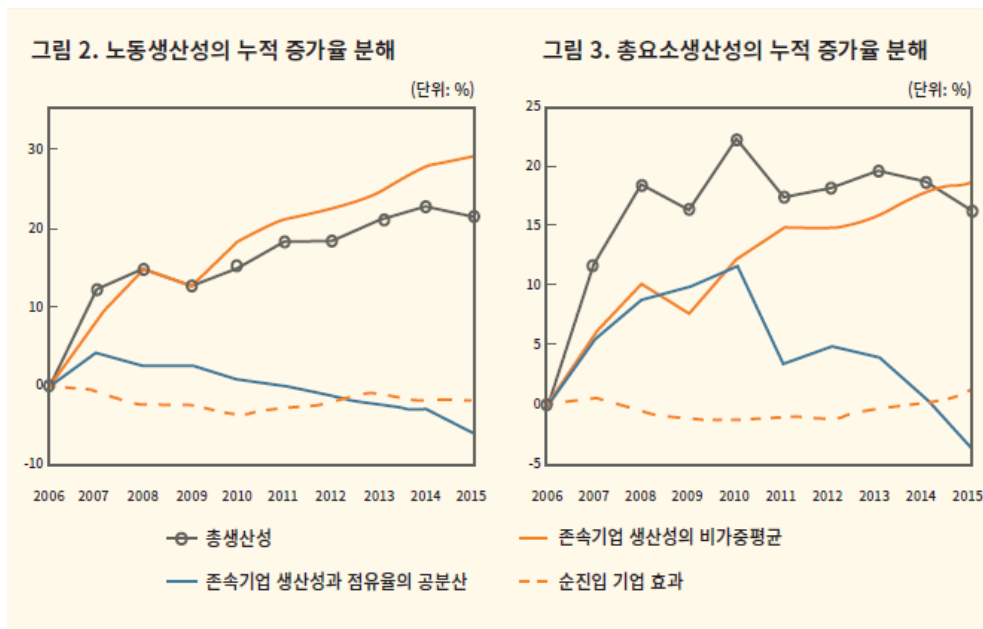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노동생산성(PPP) 수준과 5년 평균 증가율(1980-2014, PWT 9.0)



□ 왜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2011년 이후 급감?

- 보수: 공급적 충격이므로 규제완화와 노동유연성 제고로 경제의 공급 능력 증가시켜야
- 진보: 양극화가 만성적 수요부족 유발하여 구조적 침체 야기
- 이 기간 취업률 급증했으나 고령 취업자 비율도 급증(인력노령화의 결과?)
- 대부분의 소득불평등 지수 이 기간에 안정적이거나 악화 속도 둔화
- 조덕상(2018): 생산성 하락 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발생했으며, 기업집단 소속 기업 사이에서 주로 발생 <그림 3>
- 허정(2018): 이 기간 수출이 침체상태에 있었고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주로 수출기업이었기 때문에 발생
- 2000년대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 급증으로 생산설비 확충했으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침체하자 이들 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발생했을 가능성(labor hoarding, capacity utilization) → 수출경기 좋아지면 다시 생산성 회복?
- 총요소생산성 감소를 기계적으로 공급요인의 결과로 해석하는데 문제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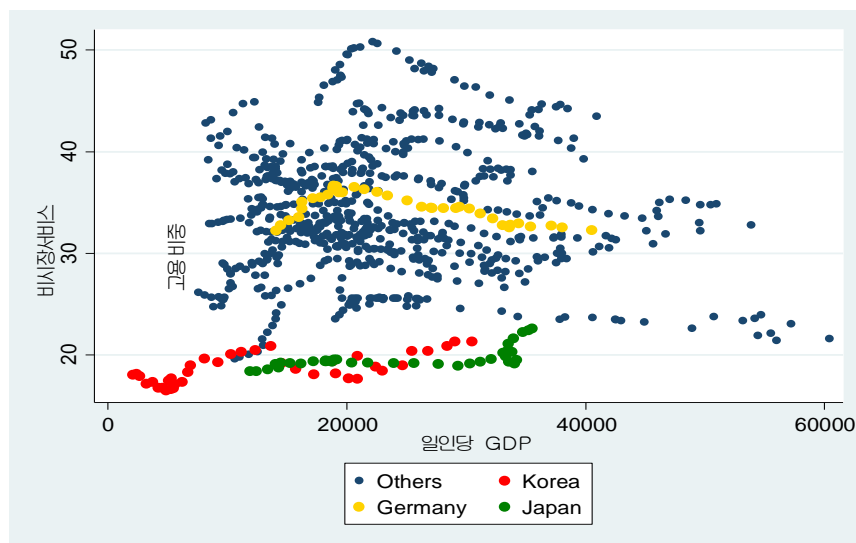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총생산성과 기업 생산성과 점유율의 공분산 (조덕상, 2018)



□ 소득불평등 완화와 공공일자리 창출로 소비와 내수 진작할 필요성 공감

- “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장려세제 간의 조합을 내는 접근 필요”
-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상태에 있어 급한 노동비용 상승(최저임금 상승, 근로시간 단축) 흡수할 능력 없다는 현실 직시해야
- 임금체제가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때 정규직 전환에 무리 발생
- 노동조합은 소수의 대기업에만 조직되어 있고 지대공유(rent sharing) 경향 보여 단체협상권 강화나 사회적타협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큰 한계
- 입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세와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강화로 중심 이동해야
- 공공일자리 확장 필요하나 경직적 수량 목표는 낭비 발생시킬 수 있고, 정부, 공기업, 사회적기업, 민간기업의 효율적 조합을 설계하는데 주력해야(그림 4)

<그림 4> 비시장서비스(교육, 보건, 행정)의 고용 비중 (EU KLEMS)



□ 정부 혁신정책의 큰 그림 아직 못 그려

-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생산성 제고와 부실 기업 과감한 정리 불가피
- 위험을 떠 안는 비관치,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 구축해야(정부 일부 위험 부담)
- 혁신 중소기업에 인력이 이동할 유인 부족하고 창의성 높이는 교육개혁의 청사진 부재